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공동대표 : 김중배·김창국·오재식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796-8364 팩스/ 793-4745 천리안 하이텔·나우콤/ PSPD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귀중
발 신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인권위담당 : 장소영 : 796-8364)
제 목 인도네시아 시위 강경진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항의 방문
날 짜 1996. 8. 2. (총 5 쪽) 첨부자료 1, 2 참조

보 도 협 조 요 청 서

인도네시아 시위 강경진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항의 방문

일시 및 장소 : 1996년 8월 2일(목) 오후 4시 인도네시아 대사관(KBS 별관 앞)

1. 바른언론을 위해 애쓰시는 귀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시위대에 대한 발포명령 등 강경진압을 계속하는 인도네시아 정부에 대하여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항의 방문이 있습니다.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와 한국인권단체 협의회 소속 10개 단체는 인도네시아 대사관을 방문하여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항의 의사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3. 항의 서한 전달 및 방문 예정자
吳在植(참여연대 공동대표), 金勝勳(한국인권단체협의회 대표, 천주교인권위원회 대표), 徐俊植(인권운동사랑방 대표), 鎮觀 스님(불교인권위원회 대표) 등 단체소속 회원
4. 항의 방문 참가 단체
- 한국인권단체협의회 소속 단체 :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 하는 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 인권위원회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전국 민주주의 민족통일 유가족협의회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 정의와 인권위원회

-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 별첨 자료 : 1. 인도네시아 정부에 보내는 서한
2. 한국정부에 보내는 서한

끝

한국 인권단체가 인도네시아 당국에 보내는 항의서한

우리는 국가와 민족에 관계없이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기 위해 애쓰는 한국의 인권단체들이다. 우리는 지난 30여년 동안 군사독재정권 치하에서 무수한 민주인사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숨죽이고 살았던 경험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국민들은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버리지 않고 끊임없이 투쟁해온 결과 이제 민주사회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연일 보도되고 있는 인도네시아 반정부 시위에 대한 수하르토 정부의 폭력적 진압에 대한 기사를 접하며 우리의 지난 80년 광주 민주항쟁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당시 군사정권은 광주의 시민들을 군화발로 짓밟고 학살하여, 그 참혹함은 이루 말할 나위 없었으며, 아직도 우리에게 아물지 않는 상처를 남겼다.

인도네시아군이 시위대에 발포령을 내렸다는 보도는 이러한 경험을 갖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깊은 우려와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하고 있다. 우리는 이미 발포령이 있기 전에도 최소한 5명 사망, 90명이 부상당했으며, 2백41명이 체포되었다고 알고 있다. 이번 시위에 대해 당국이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국가 전복 음모의 일환이라며 주요 반정부 인사들에 대한 대규모 검거 등 강경대응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하지만, 우리는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가 자국민을 대상으로 총부리를 겨누겠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민주주의를 압살하고 기본적인 인권을 유린하는 파괴행동으로 밖에는 볼 수 없다.

우리는 과거 한국과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도 30년간의 장기집권과 족벌정치체제로 인하여 모든 국민을 억압하고 일부 권력층만을 살찌우는 정책으로 일관하였기에, 이번 사태는 권위주의체제에 대항하는 인도네시아 국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의 표출이라고 본다. 인도네시아 당국이 이러한 국민의 민주화 열망을 강압적으로 외면하면 앞으로 인도네시아의 정치상황은 더욱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음을 주지하길 바란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필리핀이나 한국의 민주화 경험에서 확인하였듯이 국민을 억압하고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는 정권은 결국 국민의 힘에 의해 무너지고 만다는 역사적 교훈을 상기하고자 한다.

우리는 인도네시아 현 사태에 대한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다음의 내용을 촉구한다.

1. 인도네시아군의 시위대에 대한 발포령을 즉각 철회하라
2. 인도네시아 국민의 평화로운 시위를 보장하라
3. 현재 소재가 파악되고 있지 않은 인도네시아 민주당의 당원 1백 85명에 대하여 당국이 진상을 규명하라
4. 체포한 평화 시위자에 대한 즉각적인 석방과 구금자, 부상자들이 가족과 변호사를 만날 수 있도록 하라
5. 체포한 시위자들에 대한 불법적인 수사과 고문을 즉각 중단하라

6. 현재 불법적으로 체포한 사람들의 명단과 소재를 공개하라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인도네시아 당국은 국제적인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며, 우리는 또한 국제인권단체들과 연대하여 인도네시아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1996년 8월 2일

- 한국인권단체협의회 소속 단체 :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 하는 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 인권위원회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전국 민주주의 민족통일 유가족협의회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 정의와 인권위원회

-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인도네시아 강경시위진압에 대한 우리 정부의 공식 항의를 촉구 드립니다.

1. 세계의 평화와 인권을 위한 외교행정을 수행하느라 애쓰시는 외무부 장관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및 한국인권단체협의회 소속 10개단체는 국내외 인권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민간단체입니다.

3. 지금까지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서는, 최소한 5명이 사망하고 2백41명이 체포되고 90명이 부상당했다고 하며, 인도네시아 민주당 당원 1백85명이 소재를 파악할 수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노동 운동가에 대한 고문도 저질러지고 있다고 합니다. 더욱이 지난 30일에는 시위대를 현장에서 사살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시위대에 대한 발포명령은 심각한 비극을 낳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사태에 대하여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인도네시아 사태는 우리에게 80년 광주의 비극적 사태를 상기시켜 줍니다. 당시 광주의 수많은 시민들의 희생은 지금도 우리 국민 모두에게 깊은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비록 다른나라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이대로 방관하고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경제성장과 더불어 정치적 민주화를 달성한 드문 사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군사 더욱이 우리는 쿠데타를 통하여 정권을 잡고 온갖 비리를 저지른 두 전직 대통령을 사법의 심판대에 올림으로서 민주주의에 대한 한국 국민의 확고한 의지를 내외에 과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 대한 아시아 각국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를 생각할 때 아시아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의사 표명 및 행동을 취하는 것이 아시아의 책임있는 국가로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5월 27일 김영삼 대통령께서 "미얀마 (옛 버마) 정부에 민주화 노력과 인권 존중을 촉구한 것은, 우리나라 정부가 취해야할 조치의 좋은 선례라고 생각합니다.

5. 이에 우리는 이번 인도네시아 시위대 강경 진압과 관련하여 민주주의와 인권을 옹호하는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항의 입장을 표명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 하는 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 인권위원회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전국 민주주의 민족통일 유가족협의회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 정의와 인권위원회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